

제7장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

제1절 통일교육의 활성화

1. 통일교육 체계와 방향 정립

가. 통일교육 기본지침서의 발간

통일 및 북한관련 교육은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공교육’, ‘통일·안보교육’을 거쳐 ‘통일교육’으로 변화해 왔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통일환경은 질적으로 급변하였다. 즉 소련·동구공산권의 붕괴와 변혁, 독일의 통일, 한·중 수교, 남북한 기본합의서의 체결,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그리고 북한의 체제위기 심화 등 국내외적 환경이 급변하고, 통일이 가시권내에 진입함에 따라 통일교육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제6차 교육과정(1992~현재)에서 통일교육을 중점 교육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통일·안보교육이라는 명칭 대신 통일교육이란 명칭을 공식화하였다. 이는 통일교육이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분단극복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통일을 모색함과 아울러 통일이후 민족공동체의 삶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에 토대를 두고 있다.

통일부는 1990년대 들어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피교육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수기법을 개발·보급하고자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정기적으로 발간, 일선 교육현장에 지원하여 왔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에는 95년판 통일교육지침서 발간 이래의 대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와 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한편, 각급 교육현장과 관계전문가들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정부」-「통일교육기본방향」이라는 제하의 기본지침서를 발간(6,500부)하였다.

동 지침서에서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각종 통일교육 활동에서 강조해야 할 사항을 25개 주제항목으로 나누어 항목별 내용설명과 함께 지도관점, 교수기법 등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통일부는 동 지침서를 각급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을 비롯하여 6,000여 기관·단체에 널리 보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올바른 통일의식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기여하였다.

나. 통일교육교재의 발간

통일부에서는 통일교육의 기본교재로 「통일문제 이해」, 「북한문제 이해」와 부교재로 「통일문답」을 발간,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 등에 보급하여 통일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통일문제 이해」는 정부의 대북정책기조 등 통일문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북한문제 이해」는 분야별 북한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북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찬되었다. 또한 부교재인 「통일문답」은 남북관계 주요현안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과 북한의 정책노선 등 여러 가지 쟁점사

안에 대해 문답식의 자세한 해설을 제시하고 있다.

범국민적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하여 보급되는 이 교재들은 각 대학의 강의교재로 사용되는 등 그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통일대비요원의 통일대비역량을 배양시키기 위한 교육교재로 통일연구 참고자료를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이해하기 쉽고 통일교육의 효과를 배가시킬 시청각교재를 개발,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예정이다.

다.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1) 입법 취지

한반도의 대내외적 상황을 감안할 때, 통일은 현실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통일의 객관적 조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막상 그 구체적인 대비에 있어서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현실적 과제로 등장한 통일문제를 부정적 시각으로 대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범국민적 통일대비태세 확립의 필요에 의해 「통일교육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행 통일교육은 범국가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통일문제의 중요성과 방대성에 비추어 볼 때,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통일교육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간부문의 협력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자치단체,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과 건실한 민간통일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는 「통일교육지원법」의 주요 입법취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지원법’이라는 명칭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 제정 경과

「통일교육지원법」 제정은 통일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췑96.9 국무총리주재 국정좌담회)에 의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통일부는 독일 등 분단국의 통일교육 사례와 사계전문가 및 교육계의 의견을 참고하여 법률안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광범위한 국민여론의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췑97.8.7~8.26) 및 공청회(췑97.9.1)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확정된 법률안을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췑97.10.21)을 거쳐 동년 10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제출된 법안은 대통령 선거로 인한 국회일정의 단축으로 다음해로 이월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제199회 임시국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췑99.1.5), 동년 2월 5일에 공포·제정되었다.

(3) 주요 골자

첫째,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였다.(법 제3조)

둘째,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의 기본정책이 포함된 통일교육기본계획을 통일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법 제4조),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법 제5조)

셋째, 정부는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요원의 양성·지원, 교재의 개

발·보급 등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법인, 단체를 포함)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6조)

넷째, 통일교육을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 사회교육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법 제7조), 정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진흥하며, 대학에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8조)

다섯째, 통일교육전문가의 양성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통일교육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9조)

여섯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법 제10조)

통일부는 「통일교육지원법」 제정을 국민의 통일의지 제고와 통일교육 활성화의 획기적 계기로 삼아 올바른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 사회통일교육의 강화

가. 초청·순회교육 실시

통일교육원에서의 교육은 초청교육과 순회교육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초청교육은 통일교육을 원하는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을 통일교육원으로 초청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전문·일반·특별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전문과정은 각 지역이나 기관, 학교 등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전문위원, 사회교육기관 교수요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전문적이고 심층적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운영되며, 기간은 3~5일이다.

일반과정은 공직자반, 사회단체간부반, 통일단체간부반, 자원교육반 등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 함양 및 교육·계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3일 기준으로 편성되어 실시하고 있다.

특별과정은 평통자문위원반, 사회교육기관장반, 교장·교감반, 대학교수연찬반, 대학생반, 남북교류협력반 등으로 구분되어지고, 각 대상별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남북교류협력반에서는 북한을 방문하는 기업인이나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남북 현안문제와 방북시 필요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반 교육은 재학생 및 신입생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대학 신입생반의 경우 전방견학 및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학생들의 건전한 대북관 확립과 통일의지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순회교육은 시간이나 거리 등 제반 여건상 초청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기관·단체의 간부 내지 지역의 여론 선도층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원의 교수가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초청교육보다는 단기간이지만 광범위한 지역과 많은 대상자들의 교육 욕구를 충

죽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초청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998년 11월부터 금강산 관광이 실시됨에 따라 1998년 12월말 현재까지 금강산관광객 10,959명을 대상으로 서울과 동해 현지에서 승선전 1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교육대상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1981년도부터 시작된 해외순회교육은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해외동포 밀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교육을 통해 해외동포사회에 대하여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 최근 북한동향 등을 널리 알리고 평화통일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해외동포들의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있다.

1995년에는 미국, 러시아, 동남아 등지에서, 1996년에는 유럽, 러시아 등지에서, 1997년에는 호주,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지에서, 1998년에는 독립국가연합지역(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구주지역(영국, 스위스, 스웨덴), 일본지역(동경, 시가현, 가나가와현)에서 교민회 간부, 상사주재원, 종교인, 언론인, 유학생 등 해외동포사회의 여론 선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통일대비요원 양성

통일에 대비하여 통합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전문요원의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96년부터 통일 전후 과정에서 남북한 통합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행정요원과 교육·홍보활동에 종사할 교육요원의 양성에 착수하였다.

교과내용은 통일문제에 대한 일반적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남북관계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통일업무 기초분야와 북한실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여 북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형성하게 하는 북한이해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통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각 분야별로 설명하는 통합업무 이해부분과 체제전환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내용 등으로 교과목이 설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통일행정요원 과정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4~5급 및 6~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2~3주간 교육을 하고 있으며, 통일교육요원 과정은 윤리·도덕·사회과 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3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8년 12월 현재 교육이수자는 1996년에 59명, 1997년에 563명, 1998년에 통일행정관리요원(4~5급) 166명, 통일행정실무요원(6~7급) 574명, 통일교육요원 288명 등 총 1,650명에 이른다.

통일대비반의 교육대상과 관련 행정요원의 경우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부관련기관 간부 등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요원은 사회·도덕·윤리과 중·고 교사뿐만이 아닌 각종 사회교육기관의 교수요원 등도 포함함으로써 사회전반에 통일대비 인적자원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1997년도 교육 이수자 중 305명에 대해 1998년도에 연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연찬교육의 실시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이들의 통일대비 역량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다.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즉 통일·북한문제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교과과정에 통일교육 내용을 반영토록 하며, 책자·슬라이드 등 시청각 교육자료를 제공하였다. 특히 각급 사회교육기관의 교수역량 강

화를 위해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전문위원, 사회교육기관 교수요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3. 학교통일교육의 지원

가.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지원

정부는 제6차 교육과정 실시를 계기로 탈냉전의 대외적 상황과 남북관계의 진전 등을 고려하여 민족공동체의식의 함양 및 통일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교육내용을 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2 도덕과 중3 사회과목에 통일환경의 변화와 우리정부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게재하였으며, 고등학교 정치경제와 국민윤리 과목에도 1990년대 이후의 신국제질서 형성과 남북한 유엔가입, 각종 합의서 채택 등 남북관계 진전상황과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우리의 통일정책을 보다 상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통일교육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울 송정초등학교 등 32개 학교를 통일교육시범학교로 지정·운영중에 있다. 이들 시범학교에는 통일·북한문제 관련 사진자료, 「통일문제 이해」 및 「북한이해」 등 책자, VTR 테이프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등 각종 자료를 지원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여 향후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나. 대학사회 통일의식 함양

대학사회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하여 대학신입생 특별교육, 대학통일문제연구소 지원,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 대학신입생 특별교육

대학신입생들이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현안에 관한 올바른 시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차교육은 1996년 12월부터 1997년 2월까지 총 5,400여명, 2차교육은 1997년 11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총 9,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3차교육은 1998년 12월에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판문점·땅굴 견학과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북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있으며,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해 21세기 통일시대에 대비한 대학인의 역할과 자세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들 대학신입생들에게는 대학생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개발한 「평양캠퍼스 25시」 책자를 제공하여 북한 대학생들의 생활모습과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한민족의 진로와 전망을 제시하고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특별교양서로 「통일과 21세기」를 발간·보급하였다.

(2) 대학통일문제연구소 지원

대학사회내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통일문제 관련 연구소의 설치

를 권장하는 한편 연구소별 사업계획과 실적을 검토, 1981년부터 대학통일문제연구소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후 국내외 많은 대학들이 통일문제 관련 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1998년 12월 현재 전국 80개 대학에 통일문제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다.

통일문제연구소는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개최, 북한학강좌 교재개발, 학생발표·토론회 및 대학통일문제연구소장 워크숍 개최 등 대학의 특성과 형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연구결과는 통일정책 수립과 통일교육·홍보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통일문제 학술세미나는 통일문제연구소의 기본사업으로 정착되어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대학의 연구기반 조성과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함양 등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학생발표·토론회는 지도교수 책임하에 대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발표와 토론을 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통일의식의 함양과 참여도를 제고하여 대학사회에 통일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한편 대학통일문제연구소장 워크숍은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소장들의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남북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자료의 교환으로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9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12월 16일에 ‘민족화합과 민족발전’이라는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통일부는 대학통일문제연구소의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81년 16개 대학에 1,92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초로 하여 매년 지원대학의 수를 늘리고 있으며, 1998년에는 62개 대학에 3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객관적·체계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각 대학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북한학 강좌 교재개발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북한학 강좌는 서울대 등 72개 대학에 203개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수강학생은 22,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3)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논문 현상공모는 통일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학문적 관심과 연구분위기를 북돋우는 데 주안점을 두고 1982년부터 매년 시의성있는 주제를 선정, 실시해 오고 있다.

응모논문은 사계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입선작을 선정하고 있으며, 우수입상자 전원에게는 장관 표창 및 장학금을 지급하고 입선논문은 대학생 통일논문집으로 발간, 전국 각 대학 도서관 및 통일문제연구소 등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2절 통일홍보의 강화

1. 홍보자료 개발·보급

가. 정기간행물

통일부는 그동안 1970년 8월 창간된 월간 「국토통일」을 시작으로 통일정책의 내용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통일백서」, 「남북대화」, 「주간북한동향」,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등 다양한 형태의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간·배포함으로써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와 합의기반 조성에 노력해왔다. 1997년 5월부터는 대학신입생 등을 주요대상으로 정부의 대북정책 및 북한실상 등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월간소식지 「한나라」를 발간·배포하였으며 1998년부터는 「겨레와 함께 하는 통일한마당」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4월호까지 발간·배포하였다.

나. 계기별 홍보자료

통일부는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남북간 주요현안 등에 대한 국민적 이해 제고 및 지지기반의 확산을 위하여 주요계기 발생시마다 이에 대한 해설자료를 수시로 발간·배포하였다. 1998년에는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해설자료인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햇볕정책의 의미와 추진방향」과 새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의 대북정책 추진실적을 총괄적으로 정리한 「대북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등을 제작·배포하였다.

또한 남북관계의 주요현안 발생시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1992년부터 「통일속보」를 발간하고 있다. 1998년에는 「북한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 결과」 등 7회에 걸쳐 매호 2,000부씩 발간, 사회 각계 여론선도층에 배포하여 정부의 실사구시적 대북정책 추진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시청각 홍보자료

정부의 통일방안 및 대북정책, 북한실상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1973년 슬라이드 「민족통일의 길」을 시작으로 각종 시청각자료를 제작·보급하였다.

1985년부터는 남북관계 주요 계기 발생시마다 비디오 홍보물을 제작하여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에는 당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는 비디오 테이프 「북한 핵문제의 진상과 본질」을 제작·보급하였다. 1995년에는 「국민과 함께 가는 통일의 길」이라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홍보비디오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 등에 배포하였으며, 1996년에는 바람직한 통일의 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하여」를 제작·보급하였다. 1998년에는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의 현실성·정당성을 널리 홍보하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을 해설한 강인덕 통일부장관 육성 녹음테이프 5,300개와 함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용 비디오테이프 3,850개를 제작·배포하였다.

2. 홍보활동의 전개

가. 언론을 통한 홍보

언론매체가 지니고 있는 대중 호소력과 정보전달력을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라디오

와 TV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라디오방송은 1994년부터 북한주민 및 중·러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KBS사회교육방송의 고정프로 「통일열차」에 매주 2회 출연자 및 통일칼럼을 지원하고 있다. 1998년 4월부터는 통일부 실무자가 출연하여 「주간통일소식」과 「월간주변국동향」을 해설하고 있다.

또한 대북정책 추진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1998년 6월부터 CBS 라디오방송의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프로그램에 통일교육원 교수가 대담자로 출연하여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심층적 이해를 돕고 있다. 1998년 7월부터는 주한외국인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의 통일문제와 북한실상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하여 케이블 TV방송인 아리랑TV의 통일프로그램 「Eye on North Korea」에 매주 1회 출연자 및 통일칼럼을 지원하였다. 또한 인천TV의 통일프로그램인 「통일마당 남남북녀」에도 1998년 9월부터 매주 1회 출연자와 방송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나. 첨단매체를 통한 홍보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PC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를 강화해왔다.

1992년 7월 6일 PC통신 천리안에 통일정책·북한실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PC통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북정책홍보와 국민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이어 하이텔(1993년)과 유니텔(1996년)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해마다 그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PC통신 「통일·북한방」은 주간북한동향,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보도자료, 북한영화상영안내, 통일정책관련 자료 및 통일게시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PC통신의 「통일·북한방」운동을 통해 주된 이용자인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대북정책을 홍보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세대간 공감대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특정현안에 대한 집중홍보와 특히 젊은세대의 의견을 신속히 수렴하기 위해 1996년부터 PC통신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여 왔다. 전자공청회는 통일관련 전문가들이 작성한 주제발표문을 PC통신상에 게재하고 이 주제문을 토대로 이용자들이 질의를 하면 전문가가 신속하게 응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로써 신세대층과 생생한 의견을 실시간에 교환하는 쌍방향 토론으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였다. 최근 약 400만명이 넘는 PC통신 가입자의 연령층이 점차 다양화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사이버매체를 이용한 홍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1996년 12월에는 인터넷 통일부 홈페이지 「UniKorea」(<http://www.unikorea.go.kr>)를 개설, 통일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영문판으로 제공하고 있다.

「UniKorea」는 통일관련 정보·자료의 전파수단이자, 국민들의 통일여론을 수렴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UniKorea」개설 이후 1998년말 현재 총 조회건수는 12만여회로 이용자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1998년 한해동안의 접속건수는 8만6천여건으로, 이는 전년도와 비교,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UniKorea」의 또다른 특징은 여론수렴 매개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위해 국민과의 대화통로를 다양한 형태로 열어두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거나 정보를 문의할 수 있는 「통일대화방」이 운영되고 있으며, 1998년 12월부터는 정부각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정부대표 홈페이지(<http://www.gcc.go.kr>)의 「정부정책포럼」에 통일관련 주제를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UniKorea」 초기화면에

링크시켜 놓았다. 그 밖에도 「공무원부조리신고」를 신설하여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98년 12월에는 통일·북한관련 자료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북한자료센터」(서울 광화문우체국 6층 소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를 개통·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시간·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1994년 8월 1일 개설되어 방북 및 북한주민 접촉절차, 남북간 물자교역현황, 남북교류 협력사업, 남북협력기금 현황 등에 대한 안내를 해왔던 자동전화음성정보시스템(ARS)은 PC 통신 및 인터넷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점차 실효성이 감소되어 1998년 1월 22일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다.

다. 시설물을 통한 홍보

통일부는 국민들에게 북한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일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북한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북한관은 1986년 서울북한관을 개관한 이래 1998년 12월말 현재 전국 11개 지역에 설치·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4천 7백여만명(1998년 390여만명)이 관람하여 실증적인 통일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시내용은 최근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실태, 남북한 주요현안 및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전시패널, 와이드칼라, 터치스크린, 멀티비전 등 다양한 전시매체를 통해 소개하고 있으며, 북한주민 생활에 대한 실증적인 이해를 돕고자 716종 8,918점의 북한주민 생활용품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특히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분단 현실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산 현장으로서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염원을 표상하는 상징시설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1998년에는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홍보 및 북한헌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패널 256개, 멀티슬라이드 37면, 터치스크린 676화면을 수정·보완하였으며, 북한실상을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북한의류전 등 북한관련 기획전시를 7개 북한관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통일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학생통일글짓기대회를 5개 북한관에서 개최하였고, 학생·교사·사회단체 등 3만 9천여명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북한관이 지역통일교육장으로서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북한실상을 올바르게 알리고자 「오늘의 북한」 홍보팸플렛 100,000부를 제작하여 전국 북한관에 배포하였다.

북한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연구를 돕기 위하여 북한자료센터(서울 광화문우체국 6층 소재)를 설치, 통일·북한자료의 열람·대출뿐만 아니라 북한영화 상영과 북한실상 설명회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북한자료센터’에는 57,176건의 일반자료와 26,145건의 특수자료를 소장하고 있고, 1998년도의 이용자 수는 49,081명에 달한다. 동 센터는 북한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1990년 3월부터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북한영화상영의 날’로 정해 북한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1993년 12월에는 부산, 광주, 1995년 1월부터는 대구, 전주지역으로 확대상영하고 있으며, 대학생 단체관람 등 일반단체로부터도 신청을 받아 수시상영을 하는 등 1998년 12월 말까지 총 389회 33,494명(1998년 97회 8,956명)이 관람을 하였다.

또한 1989년부터 국내 통일·북한문제 전문가와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하여 북한정세 및 주민

생활 등에 대해 토론을 하는 북한실상 설명회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1998년 12월 말까지 183회에 걸쳐 9,395명(1998년 20회 1,075명)이 참가하였다.

한편 정부는 동해안 일대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강릉시 ‘통일안보 전시관’ 조성에 필요한 41억원의 예산을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 1998년에는 토목공사비 등 18억원을 지방자치단체 자본 이전비로 강릉시에 보조하여 전시관 건립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라. 통일관련 이벤트 개최 등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1998년 3월 28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민족의 분단과 통일’이라는 주제로 대학생과 미술·조각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일그림거리’를 조성하였다. 통일그림거리는 통일예술의 장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미술작품·조각작품·대형바닥그림 등 60여점을 전시하였다. 통일그림거리는 11월 30일까지 8개월 동안 전시되었으며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내고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또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바람직한 통일의식을 고취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살고싶은 통일된 나라’, ‘남과 북 우리는 한겨레’라는 주제로 서울·경기 지역 초등학교생 527명이 참가하는 ‘통일염원 아동그림전’을 개최하였다.

1998년 7월 이후에는 ‘북한교과서 전시회’를 서울 교보문고, 과천 서울랜드, 광주 신세계 백화점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순회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학생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북한의 교육실상을 실증적으로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전국적으로 연 40만명에 이르는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3. 해외 통일홍보

가. 국제사회에 대한 통일홍보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환경 조성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가운데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정부의 입장과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신속·정확히 전파하는 데 주력해왔다.

(1) 간행물 등을 통한 홍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해설자료 등을 영·일·중국어 등 주요 외국어로 발간·배포함으로써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새정부 출범 이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을 설명한 팜플렛을 영·일·중·서반아어로 발간, 해당 언어 지역의 주요 기관 및 여론지도층에 배포하였다. 또한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와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1998년 7월에는 격월간 영문 뉴스레터인 「Korean Unification Bulletin」을 창간하여 해외 정부기관 및 저명학자, 해외공관 및 동포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매회 2,000부를 발간·배포해 오고 있다.

한편 민간단체인 평화문제연구소와 남북평화통일연구소에서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통일한

국」과 「Korea and World Affairs」를 각각 발간하여 해외동포와 외국연구기관,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배포함으로써 한반도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있다.

(2) 국제방송 등을 통한 홍보

10개 국어로 방송되는 KBS 국제방송 ‘통일을 향하여’라는 프로그램에 통일문제 전문가의 칼럼원고(월2회)와 통일교육원 교수의 인터뷰를 지원하여 국제사회에 남북관계 주요현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나. 해외동포에 대한 통일홍보

550만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민족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해외동포사회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1) 해외동포언론을 통한 홍보

15개국 47개 동포 신문사·방송사에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황에 대한 칼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을 해설한 영상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중·러지역 동포언론사에 ‘통일칼럼’을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에 담겨진 의미와 정당성 및 호혜적 협력사업의 이점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동포사회와 주재국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2) 해외동포 통일문제토론회 개최

정부는 1991년부터 매년 ‘세계한민족 통일문제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미북간 관계개선 움직임에 대응하고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미주지역 동포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1993년부터 ‘미주지역 통일문제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1998년에는 정부수립 50주년을 기념하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제8차 세계한민족 통일문제토론회를, 캐나다 밴쿠버에서 제6차 미주지역 통일문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제3절 국민의견 수렴 및 민간통일활동의 지원

1. 여론조사 실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한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국민의 정부」는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입장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본격적인 실천국면에 접

어듬에 따라 정책추진 전후단계에서 적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여론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1998년 한해동안 전개되었던 남북당국대표회담, 대북 소(牛) 및 경수로건설 지원, 금강산관광사업 등 정책사업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북한잠수정 및 무장간첩침투사건은 대북정책 목표와 원칙의 적용방법과 정책추진시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켰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여론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1998년에는 일반국민과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모니터요원을 대상으로 19차례의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2. 자문기구 운영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의 기능과 역할은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고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집결하여 민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함에 필요한 제반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한다”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내와 해외동포 대표를 자문위원에 위촉하고 있으며, 통일자문회의의 구성, 각종회의 준비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 처리, 자문위원 활동의 지원·협조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국이 설치되어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주평통은 전체회의와 국내·해외 지역회의를 개최, 통일정책에 관한 정부측 보고를 듣는 한편,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위원 의견 개진, 대북정책에 대한 건의안 채택 등 자문·건의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민주평통은 1981년 6월 5일 창설 이후 1998년 12월까지 전체회의 9회, 지역회의 7회를 개최하였다.

(1) 제8기 제2차 통일자문회의 구성·출범

민주평통이 1998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 제8기 제2차 통일자문회의의 구성과 출범회의였다.

자문위원 위촉은 1998년 4월 22일 민주평통 의장인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평통사무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자문위원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을 보강 위촉하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1998년 6월 4일 새로 선출된 제3기 지방의회 의원과 각계 원로인사 및 시민단체 대표 등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균형있게 안배하여 위촉했다.

제8기 제2차 통일자문회의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지역대표위원은 제3기 지방의원 당선자 4,179명 중 자문위원 위촉을 동의한 인사 4,117명 △직능대표위원은 22개 직능분야에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인사 7,012명 △재외동포대표위원은 해외 58개국에 거주하는 동포사회 지도급인사 2,211명 등 총 1만 3,34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원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제8기 제2차 통일자문회의는 국내와 해외회의로 구분하여 각각 개최되었다.

국내위원 전체회의는 9월 23일 서울올림픽 제1경기장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특히 전체회의에서는 ‘대북정책 추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 등 3개의 정책건의안을 채택했다.

해외위원 회의는 해외 현지회의와 국내 초청회의로 각각 진행되었다. 현지회의는 7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북미주·동남아·대양주 등 15개 해외 지역협의회 소재지에서 각각 열렸다. 또 국내 초청회의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 동안 일본, 중남미, 구주 등 5개 지역협의회 소속위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2) 여론수렴을 통한 정책건의

민주평통에 부여된 주요기능의 하나인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자문·건의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법정회의가 열렸다. 1998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민주평통 운영방향 등을 심의·확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5회 개최하였고, 상임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다. 특히 상임위원회는 5월 7일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기조’, ‘남북당국 대표회담의 과제’ 등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12월 8일 열린 지역협의회장 및 상임위원 합동회의에서는 ‘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건전한 통일의식 제고방안’,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국민화합의 과제’ 등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3개 분야의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한 중장기 과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각 분과위원회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총 20회 개최되었다. 특히 분과위원회 활동의 역동성을 진작하고 지역 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교육홍보·지역협력·여성 등 3개 분과위원회는 지방에서 세미나를 겸한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민주평통 분과위원회는 남북간의 현안문제나 통일과정, 통일후에 예상되는 과제들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정책안 제시에 연구활동의 초점을 두어 왔다. 이를 위해 통일안보, 외교, 경제사회, 문화예술, 종교 등 각 분야별 대책을 체계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회의운영의 내실을 도모해왔다.

또한 대북정책 추진에 필요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도 활발하게 펼쳐졌다. 민주평통 전문가토론회를 3회 개최하여 ‘대북정책에 포함시킬 실천과제’, ‘김정일시대의 대내외정책 변화전망과 대처방안’, ‘정경분리정책과 금강산관광사업 평가 및 대책’ 등을 정책 참고자료로 건의하였으며, ‘평화와 통일, 민족화해의 남북관계를 향하여’라는 대주제 아래 ‘햇볕정책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신흥협력체제 구상과 대책’에 관한 국내외 학자·전문가 통일문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의성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건의하였다.

이밖에도 남북교류협력, 남북대화, 북한이탈주민 대책 등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위원 의견조사를 3회 가졌으며, ‘남북당국대표회담’, ‘햇볕정책’, ‘금강산관광사업’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민주평통 전문가모니터링을 10회 실시하는 등 자문위원 및 전문가의 의견이 굴절없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3) 국민적 합의 창출 노력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적 합의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과 분야별 통일역량 결집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중앙 및 지역협의회 단위로 전개되는 이 활동은 크게 여론선도층을 대상으로 한 ‘통일정세 보고회’와 지역협의회를 중심으

로 한 일반주민 대상의 강연회와 토론회, 통일대화활동 등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8월부터 10월 사이에 전국 26개 권역별로 여론선도층인 민주평통위원과 지역유지 등 15,662명을 대상으로 1998년도 통일정세 보고회를 열고 ‘햇볕정책의 의미와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켰다. 또한 10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지역협의회 특별활동기간’을 설정하여 대국민홍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함은 물론, 통일운동의 새로운 활동모형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특별활동은 지역별로 강연회 및 보고회, 읍·면·동 순회 통일문제 간담회, 북한이탈주민초청 북한실상설명회, 기업체 및 사회단체 순회강연회 등 총 735회에 걸쳐 25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밖에도 지역협의회 단위활동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활동모형을 특화사업으로 개발, 협의회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열린 토론의 광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 이 열린 ‘통일대화의 장’은 특히 초·중·고 교장 및 교감, 도덕·윤리교사 등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개최되는 ‘통일강좌’ 운영을 통해서도 정착되고 있다. 통일강좌는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전주, 마산 등 7개 지역에서 대북정책 및 북한실상에 관한 최신 정보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열렸다.

이와 함께 각 직능분야별 활동이 자문위원 각자가 소속된 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어왔다. 이북출신 자문위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과 특히 서울지역 여성분과위원회를 포함, 전국 15개 시·도별로 구성된 여성위원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북한이탈주민초청 간담회와 여성위원간담회,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자매결연 및 각종 성금지원 등 독자적인 사업과 다양한 이벤트사업을 기획, 추진했다. 특히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여성중심 통일대비활동은 북한연구회 운영, 여성간부위원 세미나 개최 등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연구회는 민족 동질성 회복을 주제로 6월 26일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여성간부위원 세미나에서는 12월 8일과 9일 ‘통일과 여성단체교류’, ‘통일에 대비한 여성위원의 역할’ 등에 관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북한실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제고, 통일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일후계세대들의 올바른 인식 정립을 위한 활동도 전개됐다.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전국 16개 시·도에서 3,2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각 지역협의회가 주관하는 중·고교생 대북정책 설명회를 전국 1,090개 학교 65만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와 병행하여 지역협의회별로 통일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42개교)하여 보다 내실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근의 북한실상 등을 수록한 VTR 등 영상자료를 통한 홍보도 병행함으로써 현실감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이밖에도 각 협의회가 자율적으로 통일글짓기 공모전, 웅변대회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왔다.

통일문제연구 및 대국민홍보에 필요한 자문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자료지원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먼저 자문역량향양을 목적으로 실시한 자문위원 연찬은 23회 실시됐다. 수도권 신규위촉 위원과 협의회 홍보위원을 대상으로 한 연찬회는 10회에 걸쳐 1,031명을 대상으로, 11개 권역별로 개최된 지역대표위원 연찬회는 11회 2,762명을 대상으로, 협의회장 및 지회장, 간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연찬회도 2회 실시되었다.

또한 통일관련 자료 지원을 위해 민주평통 사무국에서는 남북관계 현안 분석과 대북정책 추

진현황 등에 대한 해설과 국내외 자문위원 활동내용 등을 수록한 기관지 「민주평통」(연18회)을 발간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동향」, 「내외통신」, 「자문·건의총람」 등 통일문제 연구 및 대국민 홍보에 필요한 기타 관련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왔다.

(4) 해외 통일지지기반 확충

국제적 지지기반 확충을 위해 구주·북미·일본 등 해외 14개 주요 도시에서 동포사회 지도층, 학계, 언론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외 통일문제간담회를 실시했다.

1998년 11월 23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해외 20개 지역협의회 회장단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민족 화해협력을 위한 해외통일운동의 활성화방안 등을 모색했으며, 재외동포 2세들에게 조국의 실상을 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 해외동포 대학생 국내초청 연수회를 6월 29일부터 7월 4~6일까지의 일정으로 경주, 포항에서 개최하였다.

해외 58개국에 거주하는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현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강연회, 세미나, 주재국 유력인사 초청간담회 및 동포지도자 초청 간담회 등 제반활동은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해외홍보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과 연계하여 남북교류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전개하였다. 특히 재외동포 1.5~2세들의 통일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해외에 보급하기도 했다.

나. 통일고문회의, 통일정책 평가회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 통일고문회의

통일고문회의는 1969년 5월 12일에 제정된 「국토통일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3934호)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토통일자문위원회’로 출발, 1970년 ‘국토통일고문회의’로 개칭(대통령령 제4841호)되고, 다시 1991년 2월 1일 ‘통일고문회의’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통일고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초당적·범국민적 의견을 종합하고 국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고취 선양하며, 효율적인 통일정책의 협의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통일고문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각계 원로·대표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강원용 의장을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1998년 11월 28일 통일문제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통일고문회의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통일고문의 임기를 2년 6개월로 조정하는 등 「통일고문회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다. 현 통일고문 명단은 다음과 같다.

(2) 통일정책 평가회의

통일정책의 수립과 정책수행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1990년 3월 1일 「통일정책평가단운영지침」을 제정하고 ‘통일정책평가단’을 구성하였으며, 그동안 직제개정에 따른 4차례의 지침개정을 거쳐 현재 ‘통일정책평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통일정책평가회의’는 통일 및 대북문제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추진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정책목표 달성능력을 증진시키고 정책추진의 적실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평가위원은 분야별 전문성, 직능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정치·경제·법률·언론 등 각 분야

의 전문가를 고르게 위촉하고 매년 일부를 재위촉하고 있다.

(3) 정책자문위원회

통일부는 1981년부터 중요정책의 입안·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제11074호)에 근거한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운영규정」(통일부훈령 제284호)에 따라 1998년 현재 6개 분과위(통일정책, 북한정보, 교류협력, 인도지원, 남북회담, 교육홍보) 48명을 위촉·운영하고 있다.

3. 민간통일활동 지원

정부는 다양한 민간 통일관련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전개해 왔다. 1990년대에는 많은 통일유관단체들이 결성되었는데, 과거에 비해 목적과 성격이 뚜렷한 특색있는 단체들이 많아짐으로써 민간 통일활동이 전문화되어 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주요단체들을 살펴보면 ‘한국발전연구원’, ‘세계한민족평화통일협의회’, ‘한국청년정책연구소’,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21세기통일봉사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이다.

통일관련단체는 그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보면 대중통일활동단체, 조사연구단체, 남북교류협력단체, 종교계 통일활동단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형태로 보면 허가법인(재단, 사단)과 임의단체로 나눌 수 있다. 정부는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을 1994년 3월 1일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로 전환시켰으며, 동 법률까지 1997년 3월 7일 폐지함으로써 단체활동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킨 바 있다.

민간의 통일활동은 1995년과 1998년에 두드러진 양상을 보여주었다. 1995년은 광복 50주년·분단 50년이 되는 해로서 이를 계기로 민간 통일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실천적 참여를 확산시키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다지는 데 일조를 하였다. 그러나 일부 재야단체의 ‘범청학련 통일대추진’, ‘범민족대회’ 등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등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1998년 정부는 국민의 통일의지를 결집하고, 남북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및 공동행사 등을 추진하는 등 민간통일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제정당·사회단체의 상설 범국민협의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결성을 지원하였다. 민화협은 통일 및 대북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를 가진 민간단체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구심체로서 향후 민족의 화해를 도모하고 상호신뢰와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는 1998년 10월 1일 민화협의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다.

통일문제 연구활동을 위해 결성된 단체들 중 통일부 허가법인의 수는 1998년 12월 말 현재 총 60개로서 정부는 이들 단체들이 연구·교육·홍보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들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단체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외에도 장관 표창·상장 수여,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일관련 자료배포 등을 지원하였다.